

2012. 3. 12. **Vol. 11**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화훼산업 기반 확충, 농가 경쟁력 제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개편

거시경제 동향

2012년 2월 말 외환보유액

기획 정보

미국 농업구조의 변화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화훼산업 기반 확충, 농가 경쟁력 제고

※ 본 자료는 2월 29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화훼산업 기반 확충, 농가 경쟁력 제고」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

- (목적) 화훼 유통개선 및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화훼류의 수집, 보관에서 포장, 배송, 경매 기능까지 갖춘 화훼전용 유통센터 조성
 - 지금까지는 법정 화훼공판장 6곳이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에만 편중되어 있어 중부권에 구심체 역할을 할 만한 화훼유통센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옴.
- (지원규모) '12~'13년간 629억 원
- (지원내용) 건축 18,847㎡, 집하장, 상·하차장, 전자경매시스템실 등
- (소재지) 충북 음성
- (기대효과) 「화훼유통센터」는 화훼류의 수집, 보관에서 포장, 배송, 경매 기능까지 갖춘 화훼전용 유통센터로 **지리적으로도 중부지역에 위치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
 - 소비자들은 유통비용이 줄어 보다 낮은 가격에 원하는 꽃을 구입할 수 있고, 화훼농가는 물류비용 감소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 (목적) 고가로 수입되는 백합종구의 자급화, 안정적인 수출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백합 주산지에 종구 생산단지 기반 구축
- (지원규모) '12년 50.8억 원
- (지원내용) 원원종·원종 묘 생산시설, 종구 전문생산시설, 구근 종합처리 시설 등

- (소재지) 강원 강릉·인제
- (기대효과) 그동안 백합종구는 대부분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판매되었음.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고가로 수입되는 **백합종구를 자체 증식하여 보급함으로써 백합재배농가의 실질소득과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동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종구 1개당 200~300원 낮은 가격(현재 600원 수준)으로 농가에 보급될 수 있어 생산비 절감에 따른 소득 증대는 물론 수출경쟁력 강화도 기대
 - 국산 우수품종의 개발과 보급이 확산되도록 지원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외국산 품종에 지불하던 **과도한 로열티 부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주요 농정 이슈_2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개편

※ 본 자료는 3월 7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소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개편」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문제점

- 그 동안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원함에 따라 번식농가의 사육심리를 안정시켜 한우사육기반 확대에 기여
 - ※ 한육우 사육두수(천 마리): ('00)1,590 → ('06)2,020 → ('11)2,950
- 한우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전금을 지급함에 따라 현재와 같이 공급과잉 기조에서는 사육두수 안정에 걸림돌이 되었고,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마리당 최대 30만 원까지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

□ 사육두수에 따라 보전금 차등 지급

-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사육두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전금을 지급하던 것을 사육두수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 한우 사육두수를 가임암소를 기준으로 확대, 적정, 위험 및 초과 4단계로 구분하고, 가임암소두수가 적을 경우 최대 보전금액을 높이고, 사육두수가 초과단계에서는 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

<'12년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구 분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 두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만 원/마리)	40	30	10	0

- 가임암소마리수는 전년도 말 통계청 '가축동향'의 가임암소마리수를 기준으로 하며, '12년도에는 '11년도 말 가임암소수가 1,249천 두로서 초과단계에 해당되어 보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전망

□ 평균가격 적용 월령 조정으로 가격 대표성 확보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결정에 적용되는 월령을 종전 4~5개월령에서 가축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6~7개월령으로 조정하여 가격의 대표성 확보
 - 이에 따라 송아지도 2~3개월 추가 사육을 하게 되므로 안정기준가격도 종전 165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조정
 - ※ 평균가격 적용 월령: (현행) 4~5개월령 → (조정) 6~7
 - ※ 기준가격: (현행) 165만 원/4~5개월령 → (조정) 185/6~7

거시경제 동향

2012년 2월 말 외환보유액

※ 본 자료는 3월 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2월 말 외환보유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2012년 2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158.0억 달러로 전월 말(3,113.4억 달러)보다 44.6억 달러 증가

- 이는 유로화, 파운드화 등의 강세로 인한 이들 통화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에 주로 기인
- 2월 중 늘어난 외환보유액의 거의 대부분(42.5억 달러)을 유가증권으로 운용

※ 외환보유액 구성(2012.2월 말 현재, 억 달러): 유가증권 2,895.0(91.7%), 예치금 179.7(5.7%), SDR 35.6(1.1%), IMF포지션 26.0(0.8%), 금 21.7(0.7%)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기말 기준, 억 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1월	2012.2월	(2월 중 증감)
외환보유액	2,012.2	2,699.9	2,915.7	3,064.0	3,113.4	3,158.0	(44.6)
유가증권 ¹⁾	1,803.8	2,488.6	2,679.3	2,779.4	2,852.5	2,895.0	(42.5)
예치금	201.0	163.4	189.9	202.9	178.5	179.7	(1.2)
SDR ²⁾	0.9	37.3	35.4	34.5	34.9	35.6	(0.7)
IMF포지션 ³⁾	5.8	9.8	10.2	25.5	25.8	26.0	(0.2)
금	0.7	0.8	0.8	21.7	21.7	21.7	(0.0)

주 1) 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MBS, ABS) 등

2) SDR(Special Drawing Right: 특별인출권): 국제통화기금(IMF)의 운영축(금, 달러)을 보완하기 위한 제3의 세계화폐

3) 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으로 보유하게 되는 교환성통화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권리

○ 2012년 1월 말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전월에 이어 세계 7위 수준 유지

<주요국의 외환보유액¹⁾>

단위: 억 달러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1	중국 ²⁾	31,811 (-398)	6	스위스	3,143 (-177)
2	일본	13,067 (109)	7	한국	3,113 (49)
3	러시아	5,054 (68)	8	인도 ³⁾	2,939 (-28)
4	대만	3,903 (47)	9	홍콩	2,928 (74)
5	브라질	3,551 (31)	10	독일	2,551 (162)

주 1) 잔액 기준, ()내는 전월 말대비 증감액

2) 2011년 12월 말 기준

3) 2012년 1.27일 기준

기획 정보

미국 농업구조의 변화

※ 본 자료는 2011년 12월 미 농무부(USDA) 경제연구국(ERS)에서 발표한 「미국 농업의 구조변화(The Changing Organization of U.S Farming)」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농협경제연구소 「NHERI 주간 브리프」 인용).

□ 농업노동인구와 농지의 감소

- 25년간(1982~2007년) 농업부문의 고용 노동인구는 30%, 농업경영주와 가족으로 구성된 자가 노동인구는 40%씩 감소
 - 영농규모의 경우: 규모가 작은 경영주는 주로 가족 노동에 의존하는 반면, 규모가 큰 경영주일수록 노동인력을 더 많이 고용
 - ※ 농축산물 매출액이 1만~10만 달러인 경우('07년): 34% 농업인력 고용
 - 농축산물 매출액이 1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07년): 88% 농업인력 고용
 - 경영주의 경우: 65세 이상은 18%('82년) → 30%('07년)로 증가한 반면, 35세 미만은 16% → 5%로 감소 ⇒ 고령화 급속 진행
- 2007년 미국의 전체 농지면적은 11억 6천만 에이커(약 4억 7천만 ha)로, 1982년의 12억 3천만 에이커(약 4억 98백만 ha)보다 약 6%(약 7천만 에이커) 감소
 - 전체 국토면적 중 농지면적 비중: ('82) 54% → ('07) 51%
 - 경종작물 농지가 가장 크게 줄었으며(6천 만 에이커 감소), 초지와 방목지 등의 면적은 증가(17백 만 에이커 증가)
 - ※ 경종작물농지: ('82) 4억 69백 만 에이커 → ('07) 4억 8백 만 에이커
 - 초지와 방목지: ('82) 5억 97백 만 에이커 → ('07) 6억 14백 만 에이커
 - 도시가 팽창하면서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 약 4천 만 에이커('82~'07)

□ 농업경영체의 변화

- 1988~2007년 기간 중 전체 농업경영체의 97~99%가 가족농 형태로 운영될 만큼, 가족농은 오랜 기간 미국 농업의 근간이 되어 옴.

- 농축산물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농업경영체가 가족농임.
 - ※ 가족농의 비중은 97%('07), 이들 가족농이 미국 전체 농업 생산의 82%를 담당
 - ※ 영농규모가 클수록 가족농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매출액이 1백만 달러 이상인 대규모 경영체의 경우도 가족농이 86%를 차지
- 한편, 대규모 기업농의 비중은 1% 미만에 불과, 이 중 축산업 경영: 44%, 고부가가치 작물(채소, 과일, 온실농업) 재배: 39%
- 가족농 중심의 농업경영체는 크게 개인소유(proprietorship), 합자(partnership) 및 주식회사(corporation) 형태로 운영됨.
 - 1982~2007년 기간 중 전체 농장의 98~99%가 이들 세 가지 경영체로 운영, 이 중 개인소유 경영체가 86~88% 차지
 - 경영체 형태별로 매출 비중의 변화(1982~2007년)를 살펴보면,
 - ※ 개인소유 경영체의 경우: 10%포인트 감소
 - 합자 및 주식회사 경영체의 경우: 5%포인트 증가
 - 영농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개인소유 보다는 합자나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
 - ※ 연간 매출액이 1만 달러 미만인 경우('07년): 7% 개인소유 경영체
 - 연간 매출액이 1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07년): 51% 개인소유 경영체

□ 작물보험과 농가소득지원 수위

- 농가의 중요한 리스크 관리 수단인 '연방작물보험(Federal Crop Insurance)' 가입은 농업법 등 작물보험 확대를 위한 각종 법안 시행으로 꾸준히 증가
 - 특히, 1994년 연방작물보험개혁법(Federal Crop Insurance Reform Act)이 의회를 통과한 후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작물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
 - 연방 작물보험에 가입한 농지면적은 2배('89~'07), 보험료 기준으로는 약 6.7배 규모로 각각 증가
 - ※ 농지면적 기준: ('89) 1억 에이커 → ('07) 2억 에이커 이상
 - ※ 보험료 기준: ('89) 9억 달러 → ('07) 60억 달러 이상

- 휴경 보조, 가격지지, 공급조정 프로그램 등 → 1990년대 이후 직접 지불제 등 품목관련 소득보조와 환경보전 지원 정책으로 전환
- 1986년 환경보전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이 시행된 이후, 농가에 대한 환경보전 지원액이 크게 증가
 - ※ 환경보전지원액('07년 불변가격): ('82) 4억 3천 만 달러 미만 → ('07) 30억 달러 이상
- 영농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주로 환경보전 지원을 받으며,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품목관련 소득보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 농가의 연간 매출액이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07년): 환경보조 지원(약 60%)
농가의 연간 매출액이 25만 달러 이상인 경우('07년): 품목관련 소득보조(70%)
 - * 품목관련 소득보조는 곡물과 면화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소득지지 정책으로 시장가격에 관계없이 면적기준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직접지불(Direct Payments)과 시장가격에 연동된 경기대응보조(Countercyclical Payments) 등의 형태로 보조가 이루어짐.

□ 농업생산성 향상

- 농업노동인구와 농지가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 산출이 증대되면서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
- 1982~2007년 기간 중 미국의 농업 산출은 35% 증가, '총요소생산성'은 45% 이상 향상됨.
 - ※ '총요소생산성(TFP)': 노동·토지·자본·중간재 등 모든 생산요소를 반영한 생산성 지표를 의미하며, 하나의 생산요소(예: 노동생산성)만을 고려한 생산성 지표와 구별
- 농업생산성 향상은 ① 기술 혁신(유전공학 도입 등), ② 생산관리 향상(관개 개선 및 농약사용 감소 등), ③ 새로운 시장의 형성(유기농산물 수요 증대 등) 등으로 농업 산출이 늘어난데 기인하며, 그 동안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 "미국 농업이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와 인구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3월 5일~9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한·중 FTA, 농업 제외 여론 고조

- 농경연, 지난달 29일 한·중 FTA 관련 토론회 개최, 미국·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잇따른 FTA를 실시한 상황에서 한·중 FTA 협상에서는 농어업분야를 제외 혹은 한·중 FTA 자체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고조. 한·중 FTA를 통한 기대효과 보다 농어업분야의 피해가 더 크다며 한·중 FTA 반대 입장 고수, 추진시기 부적절,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 효과 살펴본 후 추진 제안, "안전장치 없인 협상 진행 안해(김민철 외통부 팀장)" 등 의견 제시
-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3.5).

□ 한·터키 FTA 타결 임박

-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임박. 3.5일 외교통상부 통상 교섭본부, 양국은 3.7~10일 서울에서 열리는 FTA 4차 협상에서 그동안의 논의 마무리. 2010년 4월 터키 앙카라에서 1차 협상에 나선 이후 공식 및 소규모 협상을 6차례 진행
- 자료: 농민신문(2012.3.7).

□ IDF 컨퍼런스, 한국 낙농 가치 높인다

- 2012 국제낙농연맹(IDF) 지역 컨퍼런스, 20~23일 '도전을 넘어 성공으로!' 주제로 개최, 한국 낙농 브랜드 제고 및 국제교류 확대, 동아시아 낙농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 낙농의 브랜드 가치 향상, 아시아·태평양지역 낙농 허브로서 토대 및 해외시장 확대 계기 마련. 이번 컨퍼런스 학술행사는 21~22일 동안 4개 세션·19개 주제발표로 이루어짐. 특히 세계 각국의 낙농정책과 원유 공급시스템, 마케팅 트렌드 등 과거와 현재, 선진국과 개발국, 동양과 서양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분석이 이어질 예정
- 자료: 농민신문(2012.3.7).

□ '핵심리더 역할 중실...농업계 이바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최, 3.6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스타팜' 전진대회에서 '스타팜'과 '색깔 있는 마을 대표' 등 400여명은 농업계 핵심리더로 부농창출과 도농소통,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을 결의. '대한민국 스타팜'은 친환경,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전통식품 등 국가에서 인증하는 농장이나 업체 중 타의 모범이 돼 품관원이 지정한 곳으로 지난해 100개 선정, 올해 731개로 확대할 예정

자료: 농수축산신문(2012.3.7).

□ 마늘·양파 수급안정자금 지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마늘·양파 수급 및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위해 올해 신규로 마늘·양파 수급안정자금 사업대상자 모집. 지원규모=총 280억 원, 농가나 작목반 등과 9월 이후 파종시기에 수매약정, 내년 출하시기에 마늘, 양파를 수매할 계획이 있는 법인 신청 가능. 지원용도=마늘·양파 계약재배 수매자금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품대. 대출금리=무이자. 대출기간=3년 이내로 4.20~9.20일까지, 사업기간 동안 대출액의 125% 이상 계약재배를 통해 마늘, 양파를 수매하는 조건으로 지원

자료: 원예산업신문(2012.3.7).

□ 면세유 지속인상...시설농가 '위장'

- 면세경유가격이 이달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 1019원 보다 리터당 8%, 137원 오른 1156원에 거래. 기존 면세경유 난방기 사용 농가의 경제난 심화. 작물정식 시기 늦추는 등 유류비 절감 '고심'. 매년 면세경유 가격이 상승해 농가들의 어려움이 점점 가중.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유류비 지원 불구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냉랭

자료: 농수축산신문(2012.3.7).

□ 농촌지역 사회적 기업, 도시의 4분의 1

- 이규천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연구' 통해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이 군 단위 농촌지역은 1.9개소로 도시지역 7.7개소의 4분의 1에 불과, 운영상태도 열악. 유형별 성장 단계별 지원방식의 다양화와 간접지원방식 강화 등 필요, 종합적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추진

자료: 농수축산신문(2012.3.5).

□ 축산차량 의무등록·동물복지 농장 인증 본격화

- 새로 도입되는 축산제도·시행시기 ◆축산업허가제('13년)=양돈농장 8천여 개 대상, 13년 시행에 맞춰 올해에는 축산관련 종사자 2만1천명 교육 실시 ◆축산차량등록제('12년)=올해에는 1만5천 대 등록·시행. 농장출입 빈도가 높고, 농장주 또는 가족과 접촉이 많은 시설출입차량 해당, 장기적으로는 농장주 가족차량 및 비정규 차량까지 확대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12년)=산란계 농장 대상, 15년까지 4대축종(한우·우·젖소·돼지·닭)으로 확대 ◆농장단위 돼지이력제('13년)=오는 10월부터 생산이력제 우선 추진. 모든 양돈농장에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돼지에 대해서는 이동 또는 도축금지 조치 ◆수의사 처방제('13년)=하위법령을 개정 혹은 대상약품 선정, 전체 동물약품 대비 13년에는 15%, 18년에는 20%로 확대하되,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대책을 병행해 추진

자료: 축산신문(2012.3.5).

□ 농어업 보조금 선정·관리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3.7일 5,000만 원 이상의 농어업시설 보조금 지원시 현지 합동조사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농식품부에 제도 개선 권고. 검토기간 현행 10일→1개월 연장, 보조금이 편중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 신청자의 과거 보조금 지원이력 함께 제출, 사업

자로 선정되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 공개,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지자체가 시설물 상태를 정기 점검해 관리에 소홀한 보조사업자는 앞으로 선정심사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
자료: 농민신문(2012.3.9).

□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액 연 1,000억원 넘어

- 농식품부,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늘어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액은 1,326억 2,800만 원으로 전년의 903억 3,300만 원보다 423억 원(46.8%) 증가하여 처음으로 1,000억 원 넘어섬.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복구비도 늘어나는 추세. 2008~2010년 3년 동안 농업기상재해에 따른 피해 복구비로 모두 1조 1,044억 원이 투입. 2008년 921억 원, 2009년 1,088억 원, 2010년 9,035억 원으로 해마다 복구비 급증



자료: 농민신문(2012.3.9).

연구 지원 정보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

※ 본 자료는 3월 5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환경부, 환경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두 팔 걷었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개요

-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고 있음.
 - 현재 인증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총 644개이며 이 중 환경분야는 110개(17%)임.
- 환경·복지 등 해당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수익구조 창출 등 지속가능한 경영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수익구조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인증 요건 일부를 미충족하지만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으며,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지향하는 경우, 환경부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단체)을 의미

□ 주요 내용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 2회(4월, 11월) 지정 대상을 선정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회가 제공,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추천, 기업경영을 위한 집중 컨설팅 등을 제공받게 됨.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기 인증 받은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인증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경영컨설팅,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등 전반적 지원 사업이 병행
 -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예정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그간 재활용 분야 위주의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이 환경교육, 보건, 녹색구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